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모바일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 전면확대... 사업자 52만명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모바일 손택스 내 실시간 소득 파악 서비스를 11종에서 45종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와 계약맺은 용역사업자는 매일 자신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기능이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 등에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52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은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에서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로 확대된다.

자신의 소득자료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내 '복지이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정책금융 지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사에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 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자체 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해,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IN&OUT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IN&OUT제도는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 악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Out)하고, 신규 혁신기업을 선정(In)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 양도세 상위 1%가 전체 소득 70%... 하위 20%는 0.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은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